

【특집】 구제역 확산, 그 파장과 전망】

■ 정부 정책

구제역 조기종식 및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 강구

- 가축방역대책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, 제한적인 예방접종 실시 방침 결정 -
- 비발생 지자체에서도 발생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차단방역 강화키로 -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남북부,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,
○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·예천, 경기 파주·고양·연천 5개 시군이며 특히,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,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소 약 13만3천여 마리(7천여 농가)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.

○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,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백신을 검토키로 하였다.

○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한다.

* 소의 경우 돼지보다 더 잘 감염되고 백신 효과가 우수하며,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고려, 소에 한해 우선 실시

* 예방접종 대상(잠정) : 7,016호, 소 133천여마리

안동 : 1,446호 17천마리, 예천 : 4,106호 47천마리, 연천 : 396호 18천마리, 파주 : 723호 31천마리, 고양 : 345호 20천마리

- 예방접종은 공무원, 공중방역수의사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앞으로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의사회와 협력, 민간 수의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한편,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, 영국(퍼브라이트 연구소)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였다.
- 농림수산식품부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고,
 -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 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.
-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(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)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고,
 -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.
 - * 마지막 예방 접종 또는 구제역 최종 발생 2주후부터 검사 실시
- 한편,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는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 - 이를 위해 비발생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 - 이 예산은 전국 156개 시·군·구에 대해 가축 사육규모에 따라 4억원부터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, 통제초소 운영·매몰지 사후관리 등 지역별 차단방역에 사용된다.
 - 또한,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된 「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」을 행정안전부로 옮겨, 인력·장비 지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 공조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

-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후 면역이 형성(2주 소요)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,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 및 외부인·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비발생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제역 예방수칙을 지금보다 한층 더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.

〈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축산농가 준수사항 〉

- 축사 내·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, 외부인 및 근로자 통제 철저
-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석 금지
-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사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,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
-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,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공항만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,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 금지
-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, 가축 매몰 및 이동통제 등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

- 아울러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
 -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과,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과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해 줄 것과 여행 후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,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. 